

보 도 자 료			
	보도일시	2020년 12월 14일 15:3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	배연진 과장/ 이현준 사무관 044-201-6950/ 6965
	배포일시	2020. 12. 14./ 총 7매	

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...기후안심 국가 구현

- ◇ ‘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’ 녹색성장위원회 심의·확정
- ◇ **홍수·가뭄 등 ‘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’ 선정하여 집중 추진**

□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‘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(이하 제3차 적응대책)’이 12월 14일에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, 확정됐다고 밝혔다.

-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,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,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축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, 목표,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적응 분야 최상위대책이다.

* 제1차 적응대책(‘11~’15), 제2차 적응대책(‘16~’20)

- 환경부는 제3차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여 국가 기후변화 위험(리스크) 목록을 구축했다.
- 이 목록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9회 차례의 협치(거버넌스) 포럼*, 공청회, 국민체감형 대책 마련 토론회**, 부처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.

* 전문가, 지역(지자체, 지역연구기관), 산업계(공공기관, 민간기업), 시민사회, 청년단체

** 상습침수지역 주민대표, 농어민 대표, 산불·산사태 관련 전문가, 사회복지사, 건설현장 소장 등 참석

- 제3차 적응대책은 ‘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’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, △기후위험 적응력 제고*, △감시·예측 및 평가 강화, △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.

* 물관리, 생태계, 국토·연안, 농수산, 건강, 산업·에너지 등 사회 전 분야

- 이번 대책은 포럼 운영 등 국민과 함께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시민참여형 생태계 감시, 국민평가단* 운영 등 대책의 수립-이행-평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.

* 정부, 광역·기초지자체, 전문가, 시민사회, 청년,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 참여

- 아울러 정부·전문가 중심의 대책이 아닌 ‘국민 체감형 대책’이 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‘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*’를 선정하고,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.

* ①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, ②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③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④ 산사태,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⑤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, ⑥ 감염병,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, ⑦ 건강·경제·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, ⑧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

- 제3차 적응대책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.

< 정책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>

- 증가하는 기후위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한다.

- 물관리 부문은 홍수·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는 한편, 도시의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.
- 생태계 부문은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, 부처별 생태계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,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된 국가생태축을 복원하여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한다.

- 국토·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, 도로·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.
- 농수산 부문에서는 고온·병해충에 저항성이 강한 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, 농장맞춤형 재해 조기정보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, 내재해형 재배시설과 농업기반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.
-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·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.
- 아울러 건설업,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(매뉴얼)를 보급하고, 스마트 전력망 **구축** 등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.

< 정책② 기후변화 감시·예측 및 평가 >

-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·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,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한다.
- 감시 부문은 올해 2월 발사된 기상-해양-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하여 감시정보를 다원화하고, 극지방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.
 - * (천리안1호) 기상·해양 29종 → (천리안 2호) 기상·해양·환경 96종
- 예측부문은 2022년 발간예정인 '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(IPCC)' 제6차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하고, 선진국 수준으로 기후변화 예측모델을 고도화한다.
- 평가부문은 기후영향·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, 건강, 생태계 등 부문별 사회·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 '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'를 발간하는 등 과학 근거 기반의 기후위험 관리를 추진한다.

< 정책③ 적응 주류화 실현 >

- ☐ 모든 적응주체 참여와 사회 전부분의 기후탄력성 제고로 적응 주류화를 실현한다.
 - 정부정책·개발사업 추진시 '적응평가 제도'를 도입하고,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.
 - 중점관리지역(Hot Spot)에 적응 기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, 건강·경제·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, 적응산업을 육성하는 등 사회 전반의 기후탄력성을 제고한다.
 - 이와 함께, 2021년 출범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 사무국(독일 본)에 제출하고, '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'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며, 기후적응교육 및 체감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.
- ☐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부처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17개 시도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- ☐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“이번 대책은 전문가, 시민사회, 산업계, 정부 등 모든 적응주체와 함께 수립한 대책인 만큼 이행 및 평가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이 수시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”라면서,
 - “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홍수, 가뭄 등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점검·평가해나가면서 대책의 국민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」 주요내용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이현준 사무관(044-201-69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I. 개요

- (근거법령)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
 - (의의) 5년간('21~'25) 국가 적응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,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
 - (수립절차) 관계부처 합동 수립 → 녹색성장위원회 심의·확정
 - (주요경과) 국가기후리스크 마련('19.7~12) → 적응주체별 포럼*('20.1~9) → 목요대화(9.3) → 기후분과 보고(9.24) → 공청회(9.28) 및 국민토론회(10.26)
- * 지방자치단체, 전문가, 시민사회, 청년, 공공기관, 기업관계자 등 총 150명 참석(총39회)

II. 기본방향 및 비전체계도

- 기본방향
 - 과학적으로 도출된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및 선제적 대응 추진
 - 포럼, 국민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, 국민관심이 큰 홍수, 가뭄 등의 과제는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로 선정, 별도 평가 체계 마련

□ 비전체계도

최종 목표		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		
목표		◆ 2℃ 지구온도 상승에도 대비하는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 제고 ◆ 기후감시·예측 기반시설(인프라) 구축으로 과학기반 적응 추진 ◆ 모든 적응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적응 주류화 실현		
3대 정책	①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	•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• 생태계 건강성 유지 • 전 국토의 적응력 제고 •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• 건강피해 사전예방 체계 마련 •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적응역량 강화		
	② 감시·예측 및 평가 강화	• 종합 감시체계 구축 • 시나리오 생산 및 예측 고도화 • 평가도구 및 정보제공 강화		
	③ 적응 주류화 실현	• 기후적응 추진체계 강화 • 기후탄력성 제고 기반 마련 • 기후적응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제고		
핵심 전략	기후탄력성 제고	취약계층 보호	시민참여 활성화	신기후체제 대응

※ 8대 국민체감형 과제(홍수, 가뭄, 생물대발생, 산림재해, 식량안보, 감염병질환, 취약계층, 협차) 별도 평가 추진

III. 세부추진과제

F4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

- **(물관리)** 홍수·가뭄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, 지역 맞춤형 재난대응사업(대심도 빗물저류시설 등)을 추진하고, '물순환 목표관리제' 시행으로 물순환 회복
- **(생태계)** 국가 기후변화 생태계 위험성 평가, 부처별 생태계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고,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된 국가생태축 복원
- **(국토·연안)** 스마트 그린도시, 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, 사회기반시설(철도, 항만, 도로 등) 안전관리 강화 등 기후재난 대응력 제고
- **(농수산)** 농장맞춤형 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하고, 재배시설·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며, 병해충 및 외래종 관리로 식량안보 확보
- **(건강)**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(5년 주기)하고, 온열·한랭질환 및 매개체(곤충, 수인성·식품)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
- **(산업·에너지)** 취약산업별(건설, 관광 등) 적응매뉴얼을 작성·보급하고, 스마트 전력망 및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

F5 감시·예측 및 평가 강화

- **(감시)** 기상·해양·환경 정지궤도 복합위성(천리안 2호)을 활용하여 감시정보를 다원화(29종 → 96종)하고, 공간범위를 극지방으로 확대하여 이상기후 조기 탐지
- **(예측)** IPCC 평가보고서(AR6, '23) 기반으로 감축과 적응을 함께 고려하는 한국형 시나리오를 생산(1km 해상도)하고, 선진국 수준으로 예측모델 고도화
- **(평가)** 기후영향·취약성 평가도구를 고도화하고, 부문별(건강, 농수산, 생태계 등) 사회·경제적 피해 분석결과를 포함한 '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5' 발간

F6 적응 주류화 실현

- **(추진체계)** 정부정책·개발사업 추진시 '적응평가 제도'를 도입하고, '국민평가단'을 구성·운영하여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 정립
- **(기후탄력성)** 기후위험 중점관리지역(Hot Spot) 도출 및 적응 기반시설(쿨링포그 등)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, 취약지역·계층 맞춤형 지원 및 적응산업 육성
- **(협력/인식)** 국가적응보고서 UNFCCC 사무국 제출, 'UNFCCC 적응주간' 개최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, 기후적응교육 및 체감형 홍보 강화

IV. 중점 추진분야 :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

- 협치(거버넌스) 포럼(지역, 산업계, 시민사회, 청년, 전문가), 공청회, 국민토론회*, 부처협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8대 분야 대표과제 선정·관리(41개 세부추진과제)

* 상습침수지역 주민대표, 농어민 대표, 산불·산사태 관련 전문가, 사회복지사, 건설현장 소장 등

대표과제	현장의견	주요대책
홍수	주민대피 알림 강화	• 돌발홍수 예보시스템 구축, 인공지능 기반 예보
	상습침수지역 보호	• 하수관로 설계빈도 상향,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확대
가뭄	노후 상수관 누수방지	• 인공지능 기반 기반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
	물절약 홍보강화	• 체감형 가뭄정보 생산, 가뭄교육체험장 확대 운영
생물대발생	혐오감·불쾌감 조성	• 대발생 가능종 정보제공, 친환경방제 안내서 보급 등
산림재해	산사태 조기경보 강화	• 산사태 예측 시스템 고도화(1시간 예측 → 단기예보) 등
	산불취약지 정보제공	• 산불위험지도 구축, 정보통신기술 기반 산불감시 강화 등
식량안보	대체작물 정보제공	• 미래 농업기후지도 생산, 적응형 품종 개발
	농산물 안정 생산	• 농업부문 재해보험 개선(적정 보험료 부과·보상 등)
감염병·질환	행동요령 교육 강화	• 취약계층(경로당 등) 행동요령 설명회
		• 기후변화-건강관리 플랫폼(앱) 운영 등
취약계층	우선순위 단계별 지원	• 중점관리지역 선정방안 마련, 적응 기반시설 확대
	야외노동자 보호 강화	• 물품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
거버넌스	전문가 중심 → 국민체감 전환	• 시민생활실험실(리빙랩) 시범사업, 국민평가단 구성 등

V. 추진체계

- (시행계획 수립) 세부추진과제 소관부처별('21.3, 17개 부처) 및 광역지자체('21)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
- (점검 및 평가) 국민평가단*을 구성하여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이행상황 점검·평가('23. 중간평가, '25. 종합평가)

* 정부, 광역·기초지자체, 전문가, 시민사회, 청년,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 참여